

디폴트 사태는 일단락… 中 정부 손에 기업회생 여부 달려

韓 당장의 즉시 충격은 피해
“험다 주요 지표들 안정적 흐름
시스템 리스크 확산 가능성 낮아”

험다그룹이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밝히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당장 급한 채무 상환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당국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00% 오른 3만4258.32로장을 마쳤다. 스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0.95% 상승한 4395.64, 나스닥지수는 1.02% 오른 1만4896.85로장을 마감했다. 특히 다우지수와 S&P500 지수는 5거래일만에 상승 전환했다.

험다그룹의 이자지불 발표와 더불어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테이퍼링(양적 완화 축소) 일정을 구체화 하지 않으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험다그룹 사태는 중국에 특화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이나 중국 대형 은행도 (위기에) 크게 노



중국 남부 선전에 있는 중국 부동산개발회사 험다(에버그란데) 그룹 본사 앞을 23일 주민들이 지나고 있다.

/뉴스스

1036.26으로장을 마치면서 험다그룹 위기에 큰 영향을 받진 않는 모습이었다. 추석 연휴로 한국 증시가 휴장했던 지난 20일 다우지수는 ‘험다 쇼크’로 전 거래일 대비 1.78%, 나스닥 종합지수는 2.19%, 홍콩H지수는 3.38% 급락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당장의 즉시 충격은 피했지만 험다그룹 리스크는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험다그룹은 올해 말까지 5억3000만달러에 달하는 달러 채권 이자 지급이 예정돼 있어 올해 내내 디폴트 리스크에 노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험다그룹의 파산을 용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험다그룹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되면 중국 경기의 경착륙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험다그룹 사태가 제2의 리먼 사태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박수현 KB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험다그룹 사태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이번

충격이 정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 것일 뿐 아니라 주요 지표들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대출 관련 파생상품이 거의 없단 점, 중국 내 투자가 대부분이란 점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파장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불확실한 험다그룹의 미래를 결정하기는 결국 중국 정부의 손에 달렸단 평가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중국 정부가 향후 험다그룹 문제를 두고 “일차적으로 대주주의 자금을 투입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등 기업 자구 노력은 촉구하고, 2단계에선 지방성 정부가 개입해 시장을 안정화시키며, 3단계에선 부채를 조정하고 전략적 투자를 유치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수순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험다그룹리스크가 산업 전반으로 이어질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단기자금 공급보다 은행업의 부동산업에 대한 여신규제완화 및 대출회수금지조치가 나오는 지의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양유경 기자 noon@metroseoul.co.kr

“韓 경제·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중요한 시기”

기획재정부 거시경제금융회의

이억원 제1차관 “파급효과 예의주시
글로벌 인플레 등 불확실성 극복 노력”

중국 험다 그룹의 파산 위기, 미국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가능성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외의존도가 강한 우리 경제의 특성상 외부 효과로 국내 증시와 자산 등이 크게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미칠 파급효과에 대비, 선제적 위험(리스크)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중국 험다그룹 파산 우려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안정되게 이어나가기 위한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로 국내 증시가 문을 닫았던 지난 20일 중국 대표 부동산 개발업체 험다 그룹의 파산 위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증시가 출렁였다.

험다 그룹은 1조9500억 원안, 우리나라 돈 약 357조원에 달하는 채무를 견디지 못해 파산 위기에 몰렸다. 이후 국제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위 ‘중국판 리먼브라더스 사태’ 우려에 자산 가격도 폭락했다.

우리 정부는 험다 사태가 국내 경제·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中 부동산 부채누증 문제 현실로 다가와”

한은 이승현 부총재 상황점검회의 금융시장 불안요인 모니터링 강화

중국 험다그룹 위기에 대해 사태의 전개상황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상존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3일 이승현 부총재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및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추석 연휴기간 중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됐다. 중국 험다그룹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주요국 주가 및 금리가 하락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다. 다만 지난 21일 이후 험다그룹 관련 우려가 일부 완화되며 주요국 주가는 반등했다.

미 연준은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현 수준(0.00~0.25%)에서 동결했다. 자산매입 규모(매월 1200억달러)

도 유지하는 등 기존의 완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정책결정문을 통해 경제상황 진전이 예상대로 계속된다면 곧 자산매입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산매입 규모 축소(tapering)가 빠르면 다음 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중반경 종료하는 것에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승현 부총재는 회의에서 “이날 발표된 미 FOMC 결과는 시장예상과 대체로 부합했으나 테이퍼링 종료시점이 앞당겨지는 등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 험다그룹 위기는 국제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나, 부동산 관련 부채누증 문제가 현실화된 것인 만큼 동 사태의 전개상황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상존한다”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질서있는 청산 또는 회생 가능성 높아”

» 1면 ‘험다리스크 연말까지…’서 계속

험다그룹의 운명은 결국 중국 정부의 결정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가거나 중국정부가 관여해 ‘질서있는 디폴트’를 유도하는 시나리오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중국정부는 험다 문제를 기업의 자구노력을 거쳐 지방성 정부의 개입으로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의 고용 회복세가 지연되거나 인플레가 장기화될 경우 금리인상 시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자산매입 축소는 곧 경기 부양 목적으로 시중에 풀고 있는 달러를 줄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확정적 통화정책에서 긴축 정책으로 돌아선다는 신호고,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커진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우리나라로 금리 인상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가 오르면 전문학적인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서민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 차관은 “글로벌 인플레와 경기 회복의 속도, 주요 통화당국의 정책기조 동향, 신흥국발 리스크 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시장을 안정화하고, 부채조정과 전략적 투자자 유치로 기업을 회생시키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제금융센터 주혜원 책임연구원은 “디폴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에는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을 위한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질서있는 청산 또는 회생을 도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